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

2007년 12월

“곡물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 모색”

‘국제곡물가격 상승 영향과 대응전략’ 심포지엄 12월 4일 개최



연구원은 ‘국제곡물가격 상승 영향과 대응전략’이란 주제로 12월 4일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연구원은 농림부와 공동으로 12월 4일 aT센터 중회의실에서 ‘국제곡물가격 상승 영향과 대응전략’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제곡물가 상승에 따른 대응 전략 모색

개회식에서 최정섭 원장은 “국제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곡물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문을 열며, “안정적인 곡물 확보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상규 농림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는 식량자원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번 심포지엄이 우리 농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되길 당부했다.

1부는 ‘국제곡물가격 상승과 파급영향 및 대응전략’이란 주제로 열려 김병률 연구위원이 ‘국제곡물가격 상승 전망과 국내농업 파급 영향’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향후 국제곡물가격은 식용, 사료용 수요 외에 에너지 수요가 창

출되면서 수년 동안 상승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대책으로 사료와 바이오연료용 국제곡물 시장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선물 시장을 활용해 수입국 다변화, 가격차 보전 직불제를 통한 국내 유희지 곡물 재배 유도 등을 제시했다. 또한 “해외농업개발 투자를 통한 곡물의 안정적인 확보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곡물 안정 확보 위해 선물시장 활용 논의

유영대 농협선물 본부장은 ‘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선물시장 활용방안’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유 본부장은 곡물 구매의 선물거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곡물구매 및 선물거래 전문가 육성을 위한 인적 투자와 공동구매·공동용선시 개별 업체 물량가격 결정 방식 선택권 부여, 국내선물거래소의 농산물 선물 조기 상장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부와 3부에서는 해외진출 사례와 전략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코린도 서울사무소 오세운 사장이 ‘산림자원의 해외확

보 경험과 시사점’이란 제목으로 코린도 그룹의 열대조림사업 사례를 발표했다. 아그로상생 유기농업연구소 정정철 부소장은 ‘아그로상생의 해외진출 사례’ 발표를 통해 아그로상생의 연해주 농업투자 사례와 향후 연해주 농업의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장원낙농영농조합 박순철 대표는 러시아 현지 농장개발사업에 대한 사례를 발표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해외농업개발투자 사례와 전략 발표

폴무원의 배경근 구매팀장은 폴무원의 해외 콩 생산현황과 산지관리에 대해 설명했다. 굿네이버스 장경국 감사는 캄보디아와 땃은 옥수수 계약재배 실패 사례를 발표하며 “사업이 성공하려면 치밀한 계획 하에 사업을 시작해야 하며 무엇보다 현지적응과 철저한 현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연구원 김용택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농업의 해외진출 확보 전략’이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해외 농업 투자의 실태와 성과를 설명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해외농업개발투자 지원정책 추진 전략은 사전타당성 조사를 토대로 시범사업을 하여 검증하고 관련 인프라를 조성한 뒤 직접경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표를 마치고 서울대 김완배 교수의 사회로 종합토론을 하였다. 지정토론자로는 김창현 농림부 국제협력과장, 김치영 한국사료협회 부장, 서종혁 환경대 초빙교수, 유병렬 농수산물유통공사 부장, 이병화 국제농업개발원장, 이상철 농림부 축산자원순환과장, 이영일 농협사료 부장, 정종극 대한양돈협회 부회장이 참여하였다.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시범사업 성과발표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시범사업 성과발표 워크숍'을 12월 14일 연구원에서 개최했다.

연구원은 12월 14일 대회의실에서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시범사업 성과발표 워크숍'을 열었다.

개회식에서 김정호 부원장은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농촌인구 문제를 해결과제로 선정한 보기 드문 정책사업"이라며 "2007년 한 해 동안 거둔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서로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한 지자체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강원도 양구군, 화천군, 경남 남해군, 경북 안동시, 전남 곡성군, 전북 고창군, 남원시, 충남 금산군, 서천군의 사업 담당자가 각각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2008년도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토론한 뒤 워크숍을 마쳤다.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올해 4월 3일 설명회를 가진 뒤 4월 30일에 사업제안서를 받아 5월 22일 시범사업 대상지를 확정하였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점검을 위해 6월과 7월에 합동 워크숍을 갖고, 8월에 일본의 농촌지역 도시민 유치사례를 조사하였으며 10월에는 전원생활 엑스포에 참여하였다.

2차 금연협약식 17명 참여

연구원 직원들의 금연 참여 및 유도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금연협약에 17명이 참석해 11월 29일 협약식을 가졌다.

지난해부터 4차례에 걸쳐 실시한 금연협약에 총 47명이 참여했으며 모든 직원들이 협약을 지켜 성공적인 혁신사례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구동과 본관 연결통로 지붕설치



연구동과 본관을 이어주는 연결통로 지붕설치 공사를 12월 24일 완료하고 준공식을 가졌다.

우리 연구원은 2000년 3월 연구동 건설과 함께 연결통로를 만들었지만 지붕을 설치하지 않아 직원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이에 11월 말부터 지붕설치 공사를

하여 12월 24일 완료하여 기후에 관계없이 본관과 연구동을 오갈 수 있게 되었다.

생생하고 시의성 있는 정보 제공 중국사무소 체제 갖춰 본격 가동



연구원은 올 초부터 중국사무소 설치를 추진하여 10월 10일 중국 농업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사무실을 베이징에 설치하고 11월 1일

자로 초대 소장에 정정길 연구위원을 임명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중국사무소 초대 소장에 임명된 정정길 연구위원은 "중국의 농산물 수급 상황이 우리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현장에서 농정 동향 파악과 분석은 물론 연구와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의성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사무소에서 앞으로 중국관련 연구수행은 물론 한·중 자유무역협정 논의가 본격화되면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대 소장에 선임된 정정길 연구위원은 국립 대만대학교에서 농업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1996년에 연구원에 들어와 줄곧 중국 농업연구를 해 온 중국 농업전문가이다.

12월 월례초청강연회 개최



정현우 교수가 월례초청강연회에서 '고전에서 배우는 정신건강법'을 강의했다.

연구원은 12월 3일 월례초청강연회를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최정섭 원장은 월례초회에서 연구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한해를 잘 마무리하길 당부했다. 이어 정현우 전 숙대 교수가 '고전에서 배우는 정신건강법'이란 제목으로 특강을

했다. 정 교수는 주역에 나온 음양오행을 중심으로 다양한 건강법에 대해 설명했다. 건강을 위해서는 타고난 체질도 좋아야 하지만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무엇보다 자비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장자의 목계(木鷄)의

경지를 설명하며 건강을 위해 목계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길 당부했다.

월례초회에서 최정섭 원장은 제12회 농업인의 날 농업발전 유공자로 선정된 최세균 선임연구위원에게 대통령표창을, 장철수 연구위원과 김태훈 부연구위원에게 농림부 장관 표창을 각각 전달했다.



국민 관심 모아 농업·농촌의 활로를 찾자

김 정 호 부원장

올해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표현할 만하다.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변화가 그 어느 해보다 많았다. 농정의 본질적인 과제라 할 수 있는 식량 안보, 식품 안전성, 농촌사회 양극화 등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높았다. 반면에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농업계에서 공론화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농업·농촌의 위협 요인을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주요 이슈가 공론화되지 못한 아쉬움

연초부터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이 심상치 않더니 최근에는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였다. 미국의 옥수수가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공급되면서 품귀 현상을 보이자 밀이나 콩 등의 국제 가격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국내 식료품값 또한 줄줄이 따라 오르고 있다. 식료품비 상승은 서민 생활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할 사명을 지닌 농업계로서는 타산지적으로 삼아야 할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비근한 예로, 밀가루 값이 오르면 서구 음식의 수요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미래 고객인 청소년들에게 생명산업으로서 농업의 중요성을 일깨워줄 수 있다. 국제 가격의 상승에 따라 우리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것도 희망적인 요소이다. 10년 전에 중국 흑룡강성 쌀이 가마당 2만 5천원으로 내외가격차가 다섯 배나 되었는데, 지금은 4만원 수준이라니 그만큼 우리 쌀의 경쟁력이 향상된 셈이다. 우리도 생산비를 좀 더 낮추면 고품질 쌀의 수출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4월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된 것이 축산업계에는 커다란 위기였지만, 검역 과정에서 빠지는 쇠고기가 발견되

면서 국민들에게 식품안전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해썬(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사육부터 판매 단계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인증 및 우수농산물(GAP) 인증 등 다양한 인증제도를 통해 농산물의 품질이 고급화되고, 농장에서 식탁까지 철저하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가 정비되었다.

식품산업이 농림부의 주요 업무로 자리잡게 된 것도 커다란 변화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0월에 「농업·농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시장개방 진전으로 농업의 수익성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농산물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는 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인들의 염원이었다. 이제 식품산업과 국내 농업을 밀접하게 연계시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는 동시에, 국민의 식단을 양적 및 질적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려는 노력 필요


경기침체로 농촌사회 양극화의 골이 깊어진 것은 문제이다. 농업교역조건은 근년에 다소 호전되어 2006년 말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78%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나, 빈부 격차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은 도시가구보다 2배 이상 높은 실정이다. 후계인력 부족으로 농촌사회가 고령화되면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결혼이민자의 다문화가정은 늘어가고 있다. 소득 문제만이 아니라 농촌사회 전반의 양극화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농업구조의 양극분화는 미래지향적인 신호이기도 하다. 우리 농업이 평균적으로는 소농구조라고 하지만, 근년에 들어 대농의 생산 비중이 현저하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구조조정이 빠른 축산업은 10년

전보다 농가수가 30% 수준으로 줄었으나 총생산액은 두 배나 늘었다. 경제활동이 왕성한 40대 농업인의 소득이 같은 연령대의 도시근로자보다 높다는 것은 농업 경영이 평생직업으로 손색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농업인연금 제도를 통해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경영이양을 촉진하면서 젊은 농업경영자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국민의 관심을 애정으로 이어가야

이즈음에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이 애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업계가 합심하여 노력해야 한다. 농업투자에 대해 아직도 각계의 이견이 많다. 소비자들은 국제 시세보다 비싼 우리 농산물에 대해 불만이고, 정치적으로 농업을 편애하면서 소비자 보호는 약하다고 정부 정책을 꼬집는다. 납세자들은 농업투자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인식하고, 재계는 농업 보호가 경제 선진화의 발목을 잡는다고 혹평한다. 예산당국은 가격지지나 보조금 정책 같은 재정지원이 비효율적인 농업을 온존시키고 구조조정에도 역행하는 과보호적인 농정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비농업계의 이런 견해가 농업의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자칫 국론 분열을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중요한 것은 국민 모두가 한국 농업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발전 방향에 공감하는 것이다. 특히 농산물 가격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라는 경제외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국경조치를 비롯한 국내 농업보호의 수준과 아울러 농업생산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농정이념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무자년 새해에 출범하는 새 정부의 농정이 21세기 한국의 농업과 식품산업 그리고 농촌의 미래를 향해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가기를 기대한다. 



‘도시민 농촌유치’,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삼아야

송 미 령 연구위원

농촌의 인구 감소 문제는 우리 농촌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현안이다. 농촌에 사는 사람이 없다면 당연히 농촌이 유지될 수 없고, 국토의 90%에 달하는 농촌이 유지될 수 없다면 현재와 같은 국토의 모습이나 국가의 장래도 결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농촌 인구 감소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결과로 최근에 등장한 사업이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지자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이다. 농촌에도 수준 높은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그 외의 다양한 연성적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민들의 농촌 정주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함이다.

농촌 정주수요 점차 확대 추세

도시민의 농촌 정주수요는 얼마나 될까? 도시민 2천 명을 대상으로 2007년 10월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농촌 정주 의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도시 거주자 중 56.3%는 농촌에 정주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10년 내에 농촌 정주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도시민도 6.5%에 달한다.

이 결과는 2005년 10월에 도시민 3천 명을 대상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고무적이다. 다소 막연한 농촌 정주 의향이라고 볼 수 있는 56.3%라는 수치는 2005년의 56.1%와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10년 내에 농촌 정주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도시민의 비중이 2005년의 2.5%에서 2007년에 6.5%로 확대되었다. 실질적인 도시민의 농촌 정주수요가 2년 사이에 2배 이상 확대되었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가까운 시일에 농촌 정주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이들은 학력이나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이다. 그들은 농촌다움의 매력을 향유하고 싶어하며 농촌 지역사회

에 기여하고 싶은 욕구도 강하다. 지금보다 농촌 정주환경이 좀 더 개선되고, 일자리도 더 늘어나기를 바란다. 농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미리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기를 원한다.

도시민 농촌유치사업 10개 지자체 도전

농촌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농촌지역에 대한 도시민의 정주 욕구를 높이고 해당 농촌지역에 정주 의향이 있는 이들을 효과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지자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이 도입되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도시민들을 위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인 데 반해 이는 물리적인 시설 조성은 지양하고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기획되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시범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에는 공모 절차를 거쳐 10개의 지자체가 선정되어 참여하고 있다.

농촌 인구 감소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의식에 강약이 있는 것은 아니나 처음 해보는 사업인 만큼 아직은 그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꽤 성과를 올리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자기 지역에 적합한 대안에 전혀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지자체들도 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자체 간 정보 교환과 상호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반적으로는 진보하는 중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대부분 지자체들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은 대체로 자기 지역을 도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일회성 이벤트를 개최하거나 도시민 농촌 유치와 관련되는 기초 조사와 컨설팅을 수행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아직은 도시민들의 농촌 정주수요 확대와 실현을 유도할 만한 결정적 아이디어와 전략의 실천, 성과

의 도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첫술에 배부르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산업화와 도시화라는 큰 물결 속에서 맞물려 나타나는 농촌 인구 감소 현상은 한 가지의 작은 정책 사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도 믿지 않는다. 다만,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10개 농촌 지자체가 보여주는 노력이 도시민들에게 농촌의 이미지를 더욱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으며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많은 농촌 지자체에 도시민 농촌유치라는 새로운 도전의향도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본다.

지자체의 적극적 추진이 절실

농촌에 정주하며 농촌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어하는 도시민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관련되는 정책 사업을 통해 농촌 지자체를 지원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농촌 지자체들의 새로운 도전이 성공할 가능성이 꽤 높음을 뜻한다. 도시민 농촌유치를 통해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도시민들의 다양한 기여를 보태어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말로 농촌 인구 감소가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일회성 이벤트를 개최하고 컨설팅 계획 수립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지자체 스스로 엄격하게 현실을 진단하고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실천적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도전해볼 만한 일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더해짐으로써 작게는 시범사업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우리 농촌지역에 도시민들의 방문과 정주가 구체화되고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도시민 농촌유치라고 하는 새로운 도전을 기회로 삼아 농촌 지자체들이 지역 활성화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는 준비와 태세를 갖추기를 기대한다. 

2007년 농업통상의 회고

최 세 균 선임연구위원

최근 농업통상 문제는 농산물 무역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교역 당사국 간의 현안문제보다 자유무역협정(FTA)과 도하개발의제(DDA) 등 대외경제정책 차원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한·미 FTA 협상과 DDA 협상은 2007년 농업통상정책의 핵심적인 문제였다.

2007년 4월 2일, 한·미 FTA 양국 수석대표는 환하게 악수를 나누는 것으로 협상 타결을 알렸다. 이 모습은 협상 개시를 알렸던 2006년 6월 5일의 모습과 같았다. 이로써 지난 1년여 우리 사회를 달구었던 쟁점은 일단락되었다.

진통 끝에 한·미 FTA 타결

협상을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가 이처럼 치열한 대립각을 이룬 적은 없었을 것이다. 협상 때마다 보도진이 장사진을 쫓고, 국내에서 협상이 열리면 주요 방송사는 협상장 주변에 특별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시시각각 협상 진행 상황을 알렸다. 미국에서 협상이 열리면 협상단과 보도진 수백 명이 일시에 비행기로 이동하느라 표를 구하기 어려웠다. 협상이 타결된 뒤에도 국회 청문회, 공청회, 정책토론회 등이 이어졌다.

한·미 FTA는 왜 이렇게 우리 사회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것일까?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외교, 안보,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미 FTA를 평가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농업문제는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태풍의 눈으로 등장하였다. 한·미 FTA가 우리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다. 협정에 대한 비준이 이루어지고 이행에 들어가기까지는 아직도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한우 시장은 이미 한바탕 가격 하락의 소용돌이를 경험하였다.

정부는 협상타결에 맞춰 보완대책을 발표하였으며, 농업부문 보완대책은 기존 농업·농촌 투융자 계획의 수정 등 농정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처럼 한·미 FTA는 우리 농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부화를 기다리는 DDA 협상

올해는 한·미 FTA와 더불어 캐나다, 인도 등 주요국과의 FTA도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동남아국가연합(ASEAN: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10개국)과의 협정이 7월부터 이행에 들어갔다. 또한 EU와 멕시코는 한·미 FTA 타결에 자극을 받아 우리나라와의 FTA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고 협상으로까지 발전하였다.

2007년에 FTA 협상을 진행시킨 국가로는 캐나다, 인도, EU, 멕시코 등이 있고, 중국, 남미공동시장(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남미 4개국), 호주, 뉴질랜드, 걸프협력회의(GCC: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등 6개국) 등과의 FTA는 공동연구 또는 협상을 위한 사전 협의 등이 시행되었다.


세계 150개 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7년간 끌어온 도하개발의제(DDA) 협상 역시 2007년 농업통상의 커다란 관심사 가운데 하나이다. 올해 DDA 협상은 다자간 협상의 전형적인 형태 가운데 하나인 조용하면서도 바쁜 시간을 보냈다. 2006년 7월에 협상중단까지 선언되었던 DDA 협상은 2007년 1월 주요국 각료회의에서 협상 재개에 합의한 후 주요 그룹간 협의를 활발히 진행해왔다. 4월 인도에서 주요 4개국 각료들은 6월 말까지 세부원칙(모델리티)에 관한 협상을 마치고 연말까지 DDA 협상을 종결한다는 목표에 합의하였다. 팔코너(Falconer) 농업협상회의

의장은 7월에 모델리티 초안을 발표하였으나 이에 대한 주요국들의 평가는 서로 달랐다. 9월부터 12월까지 이견을 좁히기 위한 집중적인 협상이 개최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DDA 협상은 이미 분야별로 타협을 이끌어 낼 정도의 가닥이 잡혀 있는 상태이다. 미국, EU, 브라질,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의 협상 타결을 위한 결단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협상 타결의 가장 중요한 실마리는 미국이 쥐고 있다. 미국이 농업보조 감축에 동의하지 않으면 협상은 타결되기 어려운데, 복잡한 국내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다.

해를 넘긴 주요 이슈들

한·미 양국 정부는 모두 FTA가 조속히 비준되기를 희망하였으나 해를 넘기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미국의 정치 상황도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의 정치 문제는 2008년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집중되어 있다. 집권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 사이에 한·미 FTA를 보는 시각차이도 크다. 한·미 FTA 비준안은 한국과 미국 모두 각자의 변화하는 국내 정치 상황에 맞춰진 셈이다.

한·EU FTA 협상도 2007년 중에 타결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았으나 해를 넘기게 되었고 인도, 캐나다 등과의 FTA 협상도 중요한 쟁점들에 대한 합의를 새해로 미루었다. 한·중 FTA 공동연구는 마지막 단계만 남기고 있다. 새해 초에 발표될 공동연구 보고서와 양국 정부에 대한 건의도 벌써부터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DDA 협상도 타결의 마지막 단계와 있으나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타결 여부를 새해로 미루게 되었다. 

2007년 세계농업 회고, 3대 위기의 증폭

김 태 곤 연구위원

2007년 세계농업은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 각국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한편, 광물·석유·식량 등 자원확보를 둘러싸고 쟁탈전이 치열했던 한 해로 요약할 수 있다. 즉, 기상위기, 석유위기, 식량위기 등 '3대 위기'가 등장, 석유위기와 기상위기가 곡물시장에 충격을 가하여 식량위기를 유발하는 구도가 형성되었고, 또 3자간 상호작용으로 위기는 증폭되었다.

바이오에너지 수요증가로 식량부족 가속화

2007년 1월 말 미국 부시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2017년까지 가솔린 소비량을 20% 감축하고, 이를 바이오에너지로 대체한다는 새로운 에너지정책을 발표하였다. 바이오에너지 소비를 늘려서 석유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에너지안보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부시 대통령은 식량안보도 강조하고 있다. 식량수출국이면서도 "식량자급은 국가안보 문제다. 식량자급이 불가능한 국가의 존립은 상상하기 어렵다. 국제적 압력과 위협에 빠질 수 있다"고 표명한 바 있다.

에너지안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미국은, 2006년 바이오에너지 생산량 50억 갤런의 7배에 상당하는 350억 갤런을 10년 후까지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이것을 계기로, 중국, 일본, 유럽, 인도, 브라질 등지에서 바이오에너지 열풍이 불었다. 원료조달, 기술개발, 생산증대 등 바이오에너지시장을 둘러싼 주요 국가의 경쟁은 치열해졌다. 2007년부터 미국은 에탄올 원료용 옥수수 수요가 수출량을 능가하는 등 세계 전체의 옥수수 수급을 교란시켜, 가격폭등을 불러왔다. 가격폭등은 대두와 소맥 등으로 파급되어 2007년 식량위기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지구온난화가 지구촌 농업생산을 제약

지구온난화가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월, 4월, 5월 3차례에 걸쳐 유엔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4차 평가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여기서 지구온난화로 뜨거워지는 지구촌에서 경제활동과 인류생활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생물다양성 파괴와 농업생산 감소 등으로 인간의 생존기반 붕괴를 경고하였다. IPCC는 인간 활동에 의해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가 소비되는 과정에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면서, 기후변화와 그 영향, 적응방안과 완화방안 등에 관하여 과학적·기술적·사회경제적 관점에서 포괄적인 평가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 10월에는 미국의 고어 전 부통령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고와 대책을 강조해온 것을 평가받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

정되었다.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의 선진국·개도국 등 180개국이 참가한 유엔 기후변화협약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로드맵이 결정되었다. 2008년 폴란드회의, 2009년 덴마크회의를 거쳐 포스트 교토의정서를 결정하는 일정이 마련되었다.

지구온난화와 농업과의 관계는 이중적이다. 농업은 지구온난화의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이다. 농업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주로 메탄과 아산화질소이며, 이산화탄소와 같이 대기 온도를 상승시킨다.

지구온난화는 농업생산 증대효과와 감소효과를 동시에 가지지만 감소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또한 한발이나 홍수 같은 기상이변에 의한 생산감소가 식량위기를 가속화한다는 점에서 농업은 지구온난화의 피해자이다. 일정한 농업생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구온난화에 적응하는 대책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서 지구온난화를 완화하는 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식량안보 확보가 2008년 한국농업의 과제

곡물수급의 위기적인 상황은 2000년 이후 계속되고 있다. '생산정체'와 '수요증가'가 기본구도다. 전자는 식부면적, 단수 등의 제약에 의한 것이며, 지구온난화와 환경파괴가 지배적인 요인이다. 후자는 총인구, 1인당 소비량, 에너지용 수요 등이 요인이다. 인구대국 중국·인도·러시아 등에서 총인구와 1인당 소비량 증가가 현저하다. 바이오에너지 소비확대도 중요한 변수이다. 공급부족은 재고로 충당해 온 결과, 곡물재고율은 2000년 30.4%에서 2007년 15.0%로 반감하고 있다.

곡물가격은 2006년 10월 이후 급등하고 있다. 호주의 한발에 의한 소맥가격 상승을 시발로 미국에서 에탄올 수요로 옥수수 가격이 상승하였다. 이어서 대두가격이 상승하고, 소맥가격이 폭등하는 정세는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세계 곡물시장에 투기 자금이 가세, 가격상승기조에 편승하여 가격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 10월부터는 주요 수출국의 수출제한 등 불공정한 행위가 나타나고, 수입국은 수입물량 확보에 나서는 등 식량쟁탈전이 격화되고 있다.

'3대 위기'로 상징되는 2007년 세계 농업문제는 고스란히 2008년으로 이어진다. 당초 2007년 12월까지 모델리티 타결 예정이었던 DDA 협상도 선진국과 개도국의 각축 속에서 대폭 지체되고 있다. 동시다발적 FTA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 국제협상에서 공정한 무역규율 확립을 전제로 하여, 한국 농업은 지구온난화 방지에 공헌하면서, 농지·인력·기술 등이 뒷받침된 안정적인 생산력 증진을 통하여 식량안보를 확보해야 한다. 이것이 새해 한국농업에 주어진 과제이다. **R**

12월 농정 주요 동향

쇠고기 이력추적, 2008년 하반기 전국 확대

소와 쇠고기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소의 출생부터 쇠고기 판매까지의 유통경로를 관리하고 질병 유무를 표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1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1년간의 경과기간을 거친 후 2008년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동 법률안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내년 상반기에 관련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할 계획이다.

동 법률안은 소의 출생부터 쇠고기 판매까지의 개체식별 기록·관리와 표시사항을 규정하여 소의 소유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과 이를 위반 시 제재사항을 명시하였다. 즉, 소의 소유자는 소의 출생과 폐사, 양도, 양수, 출하 여부를 일정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하고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를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동 법률안은 한우 쇠고기의 기본적인 유통관리를 통한 유통질서 확립과 향후 한우의 육질 개선 등 품질 고급화를 통한 국산 쇠고기의 차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축산물가공처리법도 개정되었는데, 앞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에 유효기간이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HACCP 작업장으로 지정되면 기간에 관계없이 효력이 유지되었으나, 앞으로는 3년마다 재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여 HACCP 작업장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개정안은 HACCP 제도의 안정적인 확대·추진을 위해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설치를 명시하였다.

세계적인 쌀 부족 위기 경고 및 국제 쌀 가격 상승

국제쌀연구소(IRRI)는 13일 “추가적인 쌀 생산을 위한 노력이 없다면 단기적으로 세계적인 쌀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RRI는 세계적인 경제성장으로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도시화에 따른 노동력·경기·관개용수의 부족, 바이오 에너지 수요증가, 지구온난화 문제 등으로 인해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세계적인 쌀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쌀 재고량은 세계적인 식량위기를 겪었던 1970년대 초·중반 이후 30여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쌀의 국제가격이 20여년 만에 최고로 상승하여 세계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15일

보도했다.

WSJ는 쌀값 급등의 주요한 요인으로 쌀 수요 증가를 공급이 따르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세계 쌀 소비량은 7.5% 증가하였으나 생산량은 5.4%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한 고유가로 인한 수송비 증가, 대체연료 개발을 위한 쌀 경작지 감소 등이 쌀값 상승의 요인이다. 세계 4위 쌀 수출국인 미국은 바이오 에탄올 원료 작물인 옥수수의 재배 면적 확대에 의해 쌀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3% 줄었다. 또한 쌀 거래에 이용되는 달러화의 약세도 쌀값 상승의 한 요인이다. 쌀 공급 부족에 따라 태국에 이어 베트남과 인도가 각각 7월과 10월 쌀 수출을 제한하였다.

한편 쌀값 급등에 따라 투기자본들이 쌀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WSJ는 쌀은 세계 생산량의 7% 정도만 국제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동안 쌀에 투자하지 않았던 헤지펀드들이 향후 공급부족 사태를 예상해 투기목적으로 쌀 선물시장에 진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의 법제화 필요성

2007년 국내 유기가공식품시장은 25.7%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유기가공식품의 소비는 늘고 일반 식품과의 가격 차이는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식품시장동향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국내 유기가공식품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25.7% 성장한 3,183억 원이다. 이 가운데 가공식품은 1,768억 원으로서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 대비 24.6% 성장한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유기가공식품과 일반식품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 평균 가격프리미엄은 2.82배로서 작년의 3.50배보다 작아져 유기가공식품의 상대 가격이 작년에 비해 낮아졌다.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유기가공식품 중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비중은 89%(1,577억 원)로 매우 높으나,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약 88%가 인증 없이 자의적으로 ‘유기’ 표시를 사용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따라서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현재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의 법제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더불어 유기 원료의 함량 비율에 따라서 유기 표시 자체와 표시의 위치 등을 차등화하고 함유량을 정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국산 유기가공식품 중 78%는 수입 원료에 의존하고 있어, 유기 원료의 국내 공급기반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자료 정리: 동향분석실>

『농정바로알기』 10주 과정 성료



10주 과정으로 열린 『농정바로알기』 프로그램에 44명이 참석하여 수강했다.

연구원은 지난 10월 1일부터 10주간 매주 월요일 연구자의 지식함양과 폭넓은 농업정책 이해를 목적으로 '제1기 농정 바로알기' 과정을 개설하여 12월 3일 수료식을 가졌다. 최정섭 원장은 수료식에서 "이번 농정바로알기 과정이 폭넓은 농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연구 방향성을 찾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FTA/DDA동향, 축산업, 식품정책, 농업정책, 농촌개발, 농산물 유통 등의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 분야별 최고 전문가의 폭넓은 식견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초 신규임용 및 복직연구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직원들의 교육 참여에 대한 수요가 많아 직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그 결과 44명이 참여하여 25명이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수료하였다. 이 과정에 대한 만족도조사에서 수강생 대부분이 유익한 강좌였다고 평가했으며, 이 같은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85%에 달해 이 강좌가 연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앞으로도 『농정바로알기』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북아협력 연구 일어판 발간



연구원 어명근 선임연구위원 등이 집필한 「동북아경제협력체

구상과 농업부문의 과제」 연구보고서가 일본에서 「일·중·한 역내농업협력의 가능성」으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일본 VISTA, P.S. 출판사는 우리 연구원으로부터 「동북아경제협력체 구상과 농업부문의 과제」 보고서의 판권을 구입해 총 3권의 시리즈 보고서를 최근 완간하게 되었다.

최근에 발간한 「일·중·한 역내농업협력의 가능성」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의 농업구조, 농업구조 변동 요인, 농산물 농업구조 분석 등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신기술이전 촉진 설명회 개최

농림기술관리센터는 12월 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농기계·시스템 분야 신기술이전촉진설명회를 가졌다.

원장, 한·중 학술대회 주제발표

최정섭 원장은 12월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우리나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중국사회과학원이 공동 주최한 제3회 한·중 국제학술회의에서 「한국 농촌 개발 정책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연구진 동정

△성명환 연구위원은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APEC 시장자유화와 식품산업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를 했다.

△김창길 연구위원은 부의장 자격으로 12월 10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농업환경위원회 25차 합동회의 반 회의에 참석했다.

△김경필 부연구위원은 12월 27일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복숭아 산업 전망과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농업전망 2008 발표대회 1월 23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개최

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는 2008년 1월 23일 잠실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농업전망 2008 발표대회를 개최한다.

2008 농업전망 대회는 「한국 농업·농촌,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라는 주제하에 열려 우리 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1부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와 도전」이란 주제로 열려 한국경제연구원 김종석 원장이 한국의 경제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박동규 농업관측정보센터장이 2008년 농업·농가의 경제전망을 발표한 뒤 「신정부의 농정 방향」에 대한 발표도 있을 계획이다.

2부 1분과는 국제무역 동향과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2분과는 소비자 지향적 생산, 유통에 대해 발표가 준비되어 있다. 3분과는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란 주제하에 경영지원체계 개선, 경영체의 조직

화, 여성농업인 전문 인력화, 농식품 수출 사례 등에 대해 발표한다. 4분과는 함께 가는 복지 농촌이란 주제하에 지역경제 활성화, 노후 대책, 살기 좋은 지역 가꾸기 등에 대해 발표한다.

3부는 「산업별 이슈와 전망」이란 주제하에 1분과는 쌀, 보리, 콩의 수급과 전망, 2분과는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의 수급과 전망, 3분과는 과채류와 과일류의 수급과 전망, 4분과는 채소와 임산물의 전망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농업전망 2008 발표대회에 참가를 희망하면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와 농업관측정보센터 홈페이지(aglook.krei.re.kr)를 방문, 등록 방법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사전 등록은 2008년 1월 19일까지 받는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등록의 혼잡성을 피할 수 있고 참가비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